

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

친환경 동물복지와 안전 축산물 공급

2015.11.

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연구소 김성훈 부소장

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

친환경 동물복지와 안전 축산물 공급

CONTENTS

- 1 국내 축산업 현황 및 문제점
- 2 축산물 안전성 현안
- 3 동물복지, 지속가능한 축산업 대안
- 4 동물복지 및 친환경 축산 정책

1 국내 축산업 현황 및 문제점

- **축산관련 산업은 생산액 56조원, 종사자수 36만명 수준**
- **축산업 생산액 농림업중 비중**
 - ('90) 4조원.21.7% → ('12) 16.34.6
- **1인당 연간소비량**
 - 육류.계란.우유 : ('90) 71.1kg → ('12) 119.8 (68.5% 증가)
 - 쌀 : ('90) 119.6kg → ('12) 69.8 (41.6% 감소)
- **2012년 기준 연간 사료 2,302만톤 투입, 축산물 414만톤 생산, 축산분뇨 4,649만톤 발생**
- **연간 1인당 119.8kg 소비, 자급률 69.1%**
 - 1인당 소비량 : 육류 40.5kg(쇠고기 9.7 돼지고기 19.2 닭고기 11.6) 계란 12.1kg, 우유 67.2kg
 - 자급률 : 쇠고기 48.2% 돼지고기 77.1% 닭고기 77.4% 계란 99.5% 우유 62.8%

1 국내 축산업 현황 및 문제점

- **경제 수익성 중심 생산구조**
 -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했으나 환경 사회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
- **선진국에 비해 생산성 낮고, 환경·동물복지 면에서 취약함**
 - 모돈 1마리당 비육돈출하마리수 : 덴마크·네덜란드 25두, 한국 16.6두
- **생산비중 사료비 비중(한우 41%, 돼지 52.5%) 높음**
 - 사료곡물 95%를 수입에 의존, 축산업이 국제곡물시세에 따라 좌우됨
- **밀집사육에 따른 대규모 질병(구제역, AI 등) 피해 가능성 상존**
- **축산분뇨 관리 미흡**
 - 덜 부숙된 퇴비 액비로 인한 문제 여전
- **친환경 축산물 유통 체계 미비**
 - 수입 곡물 배합사료 위주 마블링 편중 한우 등급제 의무화 부작용
- **유기, 무항생제, 동물복지 등 친환경 인증제 농민·소비자 인지도 낮음**

2 축산물 안전성 현안

○ 국내 GMO 수입량 1,000만톤중 80%이상이 사료 원료

- 2014년 사료용GMO 수입량, 2012년 588만톤보다 46%증가한 863만톤, 2014년 식용 GMO수입량 200만톤 돌파
- 2008년 식용 GMO수입 허용이어, 2016년 GM벼 상용화 빌미 제공 우려
- 자연교배로 인한 작물의 GMO 오염, GM농산물(쌀) 수입 거부 명분 상실

○ GMO 유해성 입증 연구결과 속속 발표

- 바이러스 세균 이용한 인위적 유전자 변형·조합 안전성 문제 유발
- GMO사료 급여 염소 암컷, 변형된 우유 생산·태아 성장 장애 보고

○ 우리나라 LG그룹, GM소성장호르몬 세계 생산·수출시장 복점 논란

- EU 광우병사태 3년만인 1988년 소 성장호르몬 사용 금지, 1989년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, 이후 10여년간 미국과 무역분쟁
- 2001년 일리노이의대 사무엘 엡스타인 박사 몬산토 발암실험 결과 폭로
- 2013년 시민단체 조사 결과, 우유생산촉진 소성장호르몬 사용비율 1%
- 착유량 20%늘려 젖소 체력고갈, 동물성사료 급여, 광우병 발병 악순환
- 현재 미국·한국·남미·동남아 일부 국가 사용
- 몬산토는 문제의 소성장호르몬 사업부문을 엘랑코에 매각

2 축산물 안전성 현안

- **WTO·FTA에 이은 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로 인한 축산물 안전관리 허술**
 - 정부는 시장개방때 관세철폐 시기 연장, 쌀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, 협정발효시점 부터 무관세로 매년 3%씩 늘려 의무 수입해야 하는 축산물 TRQ(저율관세할당)물량을 남발해 만성적인 국내 축산물 공급과잉 사태 초래
 - 국산 우유가 남아돌아도 분유재고는 계속 쌓이면서 낙농포기현상 확산
 - 이로 인해 아이들이 먹는 조제분유는 100% 수입 분유를 이용해서 만듦
 - 한우사육두수가 크게 줄었으나 예전처럼 한우값 상승세 오래 유지 안됨
 - 미국, 호르몬 젓소고기 포함되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추가개방 압박
 - 축산물 검역 간소화 내지는 완화조치로 인한 안전성 관리 우려
 - 한미FTA·한EU FTA 축산물 TRQ로 인한 정부 관세수입손실 연간 6천억원
 - 호주·뉴질랜드·캐나다FTA TRQ까지 고려하면 세수감소는 연간 1조원 예상
 - 일본 TPP타결때 쌀·축산물 TRQ허용, 한국 또한 추가 TRQ감수해야 할 듯
- **정부, 광우병 관리 부실**
 -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2011년이후 소뿔살(머릿고기 HSK0206100000)을 연간 1,000톤 (국밥기준 850만인분)씩 수입
 - 해당 부위는 유럽 나라들이 광우병 위험물질(SRM)로 지목하고 나라별로 생후 6개월 또는 12개월 이후 소의 것은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

2 축산물 안전성 현안

- **대기업·외국 종속 축산업 구조 고착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협**
 - 수입 GM 배합사료 의존도 심화로 규모화 농장도 경영 위험 가중
 - 배합사료 공급 대기업이 농가를 지배하는 사실상 위탁사육 체제 구축
 - 사료업체들은 가격인상으로 국제곡물값 상승 부담을 농가에 전가함
 - 배합사료를 오랫동안 많이 먹어야 좋은 등급을 받는 현행 한우등급제 의무화는 한우농장 종속현상을 심화함
 - 2011년~2014년 소값파동 장기화로 축산농민들이 매우 어려웠으나 사료 업계 경영성과는 오히려 좋게 나타남
 - 획일적인 장기 배합사료 급여를 통한 기름진 쇠고기를 공급하는 방식은 초지 방목 위주의 호주산 쇠고기에 비해 한우 경쟁력을 더 떨어뜨림
 - 획일적인 사육방식 강요는 철소, 흑우와 같은 다양한 한우 토종 사육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어렵게
- **철지난 한우등급판정제 의무화 부작용**
 - 수입 GM 배합사료 급여 장기간 사육 강요(생산비 증가)
 - 획일적 사육을 강요해 다양한 방식의 친환경 고품질 쇠고기 생산 애로
 - 과도한 지방섭취에 따른 소비자들의 성인병 우려로 소비 위축 심화
 - 꽃등심 직화구이 부추겨 발암물질 '벤조피렌' 유발 논란 가중
 - 마블링 형성을 위해 수송아지 100% 거세로 동물복지와 배치

3 동물복지, 지속가능한 축산업 대안

○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

- 수입 GM곡물 같은 외부 의존도 탈피
- 자급 풀사료 중심 사료 급여로 동물복지에 기여하고 고품질 쇠고기 생산
- 사료비가 많이 들고 자금회전이 어려운 장기 사육방식보다 다양한 체중의 한우를 출하해서 경영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수급조절 모색
- 배합사료와 마블링(지방) 위주의 획일적인 한우등급제 개선으로 지역과 농장, 사육 품종에 적합한 다양한 사육과 유통 방식을 지원

○ 소농 중심의 동물복지 축산이 지속 가능

- 획일적인 대규모 축산업 보다 동물복지 고려한 건강한 축산물 생산에 초점
- 사육마리수를 늘리기 보다 사육농가수를 늘려 경종·축산 융복합 농업 실현
- 축사가 가축 공장아닌 동물·인간이 조화 이루는 치유 공간으로 육성

○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 공급

- 생태 자연 환경 친화형 축산업을 통한 건강한 축산물 제공
-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자-소비자들간 직거래 네트워크 활성화
- 농촌관광·체험교육 병행할 수 있는 동물복지농장 조성으로 소득 다각화

4 동물복지 및 친환경 축산 정책

○ 지속가능한 축산업

-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공존하는 산업
- 안정적인 사료 공급기반 확보

○ 친환경 축산업

- 생태·환경을 유지·보전하고, 가축 본래 습성대로 건강하게 사육
- 이렇게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

○ 농식품부, 동물복지 5개년('15~'19)종합계획 수립('15.01)

- 국내외 동물보호 요구 수용하고, 인간·동물 공존과 조화 추구
- 고품질 안전 축산물 공급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
- 사육·운송·도축 복지 기준 설정
 - ※ 닭·오리 강제 털갈이 및 폐쇄형 케이지 사육, 임신돼지 폐쇄형 칸막이 사용 등 개선 전망 (수송아지 100% 거세 현실도 되돌아 봐야 함)
 - ※ 2019년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 200대, 도축장 20개소 목표
- 동물복지농장 인증·유기축산 인증·산지생태축산 상호 연계
 - ※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비중 2013년 2%에서 2019년 8%로 확대
 - ※ 축산농가 참여 위한 동물복지직불제 도입
 - ※ 친환경 축산 전문 유통체계 구축과 지원

4 동물복지 및 친환경 축산 정책

□ 농식품부,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(2014. 1.)

○ 환경부담 최소화

-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계획 수립 의무화
- 양분총량제 도입 검토, 축산분뇨 악취 및 관리 기준 마련
- 축사표준설계도 마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(기업농 전업농

○ 친환경 축산물 공급·유통 활성화

- 전문판매장 운영, 친환경직불금 상향 조정, 동물복지·산지생태축산 확대
- 전국단위 협동조합형 패커 및 지역 거점 도축장(2015년 20개소) 구축

○ 사료 및 축산자재 공급 안정

- 수의사 처방제 적용 확대 (2013년 15% → 2017년 20%)
- 사료첨가제 인증제, 배합사료 가격표시제
- 이모작 사료작물 발직불금 지원 (40만원/ha)
- 풀사료 생산 및 농식품 부산물(쌀겨, 폐버섯배지) 활용 확대

○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

4 동물복지 및 친환경 축산 정책

○ 친환경 축산물(유기축산·동물복지) 공급 비중

- 2012년 0.7% → 2017년 5% → 2022년 10%

○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율

- 2012년 9% → 2017년 17% → 2022년 20%

○ 자급률(육류 우유 계란)

- 2012년 69.1% → 2017년 71.4% → 2022년 75.8%

□ 농식품부, 동물복지 5개년('15~'19)종합계획 수립('15.01)

○ 국내외 동물보호 요구 수용하고, 인간·동물 공존과 조화 추구

○ 고품질 안전 축산물 공급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

○ 사육·운송·도축 복지 기준 설정

- 닭·오리 강제 털갈이 및 폐쇄형 케이지 사육, 임신돼지 폐쇄형 칸막이 사용 등 개선 전망 (수송아지 100% 거세 현실도 되돌아 봐야 함)

○ 2019년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 200대, 도축장 20개소 목표

○ 동물복지농장 인증·유기축산 인증·산지생태축산 상호 연계

-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비중 2013년 2%에서 2019년 8%로 확대

○ 축산농가 참여 위한 동물복지직불제 도입

○ 친환경 축산 전문 유통체계 구축과 지원

열심히 하겠습니다!

바거리는
생명의 나라.

기초농산물
국가수매제

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
자세히

국민의 건강

국기식량

지속 가능한
농업

농민

국민의 건강